

## [ 종합·해설 ]

# 명분은 약해지고 세력은 밀리고 ...

■ “10월 기약이나, 무소속 출마냐” 기로에 선 鄭

DJ “당 깨지면 안돼” 무소속 출마 부정적

호남·중도성향 의원 지원 사격도 미온적

4·29 재보선 전주 덕진 출마를 선언한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명분과 세력에서 밀리면서 정치적 선택의 기로에 섰다.

민주당 지도부는 ‘MB 정권 심판’이라는 재보선 구도를 정치적 명분으로 ‘공천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기대했던 민주당 내부의 지원 사격도 미온적이다.

여기에 김대중 전 대통령(DJ)마저 신중한 태도를 주문, 정 전 장관의 행보를 무겁게 하고 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정동영 전 장관의 전주 덕진 공천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우선 정세균 대표를 주축으로 하는 당 지도부는 이미 외·간접적으로 ‘공천 불가’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정 전 장관의 출마는 ‘MB 실정 심판’이라는 재보선 구도를 약화시켜 전체 선거 판세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또, 지역구를 서울·동작에서 전주 덕진으로 옮기는데 대한 비판적인 여론도 등에 업고 정 전 장관을 압박하고 있다.

또 정 전 장관이 기대했던 당내외의 지원 사격도 미미한 상황이다.

정동영 전 장관 측근과 비주류 일부 의원들이 지원 사격에 나서고 있지만 기대했던 호남 및 중도 성향의 의원들은 지도부를 의식, 양비론을 바탕으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대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마저 신중한 선택을 주문하면서 정 전 장관의 발걸음이 무거워지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은 정 전 장관의 정치 입장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현실 정치 복귀에 덕담을 해줄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김대중 전 대통령은 24일 동교동을 방문한 정 전 장관에 “어떤 경우에도 당이 깨지거나 분열되는 모습을 보여서는 국민이 실망하고 당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대통령은 “당이 현 정부의 역주행에 어렵게 맞서고 있는 만큼 힘을 합쳐 노력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입법투쟁을 통해 존재감을 가졌는데 이제부터라도 당이 잘 돼야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는 정 전 장관이 공천을 못 받더라도 무소속 출마 등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지원 사격을 기대했던 정 전 장관으로는 오히

려 정치적 부담만 갖게 됐다는 평가다.

이 같은 당내외의 상황을 고려하면 정 전 장관은 사실상 선택의 기로에 섰다는 관측이다.

대승적 차원에서 당 지도부의 입장은 수용, 10월 재보선 등 후후를 기약하던지 당을 뛰쳐나와 무소속 출마를 강행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두 가지 방안 모두 정 전 장관에게는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전주 덕진 출마 포기는 대선 패배 맹에 지고 있는 정 전 장관에 또 다른 정치적 추동력의 상실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무소속 출마는 소수 야당의 분열이라는 비판에 직면한다.

특히, 공천까지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도 부담이다. 전주 덕진 출마 강행의 정치적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현재 상황으로는 정 전 장관의 선택만 남은 셈”이라며 “그러나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정치적 타격이 크다는 점에서 정 전 장관의 고민은 깊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4·29 재보선 전주 덕진 출마를 결심한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24일 서울 동교동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 대화를 나눈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연차 리스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치권을 떨게 하고 있다.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이광재 의원에 이어 혁명 의원 2명 이상의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도는 등 검찰이 여의도 공격을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검찰의 수사는 여야를 넘나들고 있지만 정치공방으로 이어질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한나라당 내에서는 부산·경남을 근거로 한 친박(친박근혜) 인사들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타나고 있고 민주당 내에서는 ‘야당을 향한 대대적인 표적사정’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 여의도 옥죄는 ‘박연차 리스트’

이광재 의원 영장 이어 혁명 의원 2명 소환설 나돌아

민주 “표적사정” 한나라 “친박 겨냥 아니냐” 의구심

인 추부길 전 청와대 비서관까지 구속되는 상황이다 보니 정치권의 주장과 목소리는 우왕좌왕 갈피를 못 잡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연차 리스트를 통해 대한민국 부패 스캔들을 청소하는 것”이라며 “일각에

서 표적수사 운운하는 것은 난센스로, 국가 사정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정치권의 물타기 논쟁은 중단돼야 한다”고 야당에 화살을 돌렸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거론되고 있

지만 용돈 수준이었을 것이란 추

측을 하고 있는 듯하다.

리스트 일원으로 일부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는 친박계 허태열 최고위원은 “지난 10년간 박연차 회장을 만난 적도 없고, 후원금 계좌를 뒤져봐도 박 회장은 물론 박 회장 가족의 이름으로 들어온 후원금도 없다”며 “물론 검찰로부터 연락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입장은 난처함을 여실히 보여준다.

김유정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추부길 전 청와대 비서관을 상대로 로비한 것을 보면 정권 실세와도 관련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면서 “검찰은 성역없이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찰의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제판이 불가피해 보이므로 재판과정에서 떳떳함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고, 리스트에 오른 것으로 알려진 서강원 의원 측은 “합법적인 후원금 외에는 없으며 검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적도 없다”고 답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이대통령 “경찰 비리 기강 해이 탓”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최근 현직 경찰관들이 각종 사건, 사고에 연루되어 사회적 파문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 “수뇌부 인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하부조직 기강이 해이해졌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지적한 뒤 “경찰은 법 질서와 윤리가 지켜지는 나라를 만드는데 최일선에 있어야 하므로 강도 높은 내부 교육이 필요하다”며 “신규 선발시 사명감을 가진 사람을 뽑아야 하고 인성교육 등을 통해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이동원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통과된 추경과 관련, “역사에 없는 대규모 추경으로 민생안정을 위해 일자리를 유지, 창

출하는데 최우선 목적을 두고 있다”면서 “아울러 서민들의 고통을 줄이는데도 목적이 있는 만큼 추경이 사각지대 없이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챙기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녹색성장에 대한 토론이 끝난 뒤, 이 대통령은 도산 안창호 선생의 ‘강산개조론’을 소개하면서 “안창호 선생은 이미 90년 전 강산을 개조하지 않으면 국가가 부흥할 수 없다는 점을 간파했다”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내용이 적혀) 수첩을 꺼내 읽어주고 싶다”고 강조했다. ‘4대강 살리기’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총의 남자’ 이재오 극비 귀국 추진

현제 미국 로스엔젤레스에 머물고 있는 한나라당 이재오 전 의원이 ‘극비 귀국’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내가 공직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자연인 자격으로 연수를 갔다 돌아온 건데 귀국일을 알릴 이유가 뭐가 있느냐”며 “조용히 귀국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측근인 진수희 의원이 24일 전했다.

이 전 의원은 나아가 “지금이 어떤 상황인데요. 요란하게 알리면 되겠느냐”고 했다고 한다. 귀국 날짜가 사전에 공개될 경우 팬클럽 회원 등 지지자들이 공항에 대거 몰려나와 차치 ‘요란한 환영행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극약처방인 셈이다.

당분간 국내정치에 거리를 두고 채

암중모색하겠다는 뜻을 수차례 밝힌 상황에서 의도하지 않은 대규모 귀국 행사가 정치적 해석을 암울할 수 있음을 다룬다.

앞서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지난 22일 미국에서 귀국했을 때 공항에 2천명 가량의 인파가 몰린 점도 이 전 의원이 ‘극비 귀국’ 결심을 굳게 한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의원은 “최소한 언론에는 귀국일을 알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측근들의 견의에 역정을 내면서 미국에서 함께 생활하는 지인들에게도 ‘극비 일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그는 “언론에 귀국일이 보도되면 비행기표를 바꿔서라도 그날은 안 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연합뉴스

## 지방의원, 신협·새마을금고 임원 못 맡는다

### 지방자치법 개정안 의결

내년 선거에서 당선하는 지방의원부터 새마을금고 임원을 맡지 못하는 등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 조항이 대폭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0년 7월 임기를 시작하는 지방의원은 국회의원과 다른 지방의회 의원, 각급 선관위원회뿐 아니

라 국회의원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새마을금고·신협 임직원, 각종 조합의 비상근 임직원을 겸할 수 없게 된다.

대학 교수는 지방의원에 당선되면 의원 임기 중 의무적으로 휴직해야 한다.

현재 지방의원 가운데 새마을금고 임직원은 95명, 신협 임직원은 28명, 각종 조합 비상근 임직원은 24명, 대학교수는 35명, 국회의원 보좌관은 1명이 겸직하고 있다.

/연합뉴스

## 남성 공안 力

자산감리 협회 600여 남성 경찰원 모집  
남성 가족증명에 ‘남성’ 대로 표기

- 경기·제주·충북·충남·전북·전남 등 6개 지역 경찰서에 남성 경찰원 600여 명을 모집
- 경찰서별로 남성 경찰원 10~20명을 모집
- 남성 경찰원은 남성 경찰원으로 관리하고 지원

